

#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의무화 업종 6→20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업종이 확대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공개된다. 이륜차(오토바이)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재 6개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강선건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이 추가된다.

대형사업장 굴뚝(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

## 고무·플라스틱 14개 업종 추가

## 오토바이 배출 허용 기준 강화

## 586개 사업장 측정 결과 공개

오염물질 측정 결과는 내년 6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t 이상인 568개 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 공개 대상이다.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로-3 기

준인 이륜차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1km를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는 2g에서 1.14g으로, 탄화수소는 0.3g에서 0.17g, 질소산화물은 0.15g에서 0.09g으로 각각 기준치가 낮아진다.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 2012만대 중 10%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하는 등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대신 이륜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현행 1만km에서 최고시속 130km 미만 이륜차는 2만km, 130km 이상 이륜차는 3만5천km까지 각각 늘어났다.

현행 16만km인 경유택시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올해 9월에 출시되는 경유택시부터 19만2000km에서 24만k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치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다만, 대상 도시는 오존 농도의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고려해 내년에 고시된다. 고시되는 도시의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륜차, 경유택시,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특별기고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



## 원자력안전위 권한 지역과 나눠야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脫)원전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당장의 효율성만 따져 원전진흥정책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원전을 점차 줄여가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감시와 방재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안전보다 원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이다.

2013년 동아시아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라는 글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확대 정책을 펴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와 ‘아이들에게 해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국내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점적 안전감시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해 왔다.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이 균형을 잃은 배경은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원안위가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실 산하로 위상이 추락하면서, 독립성을 잃은 탓에 있다. 현재 국무총리는 원자력진흥위원회(진흥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독립성을 가지고 원전 안전을 감시해야 할 원안위가 진흥 조직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제대로 된 안전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믿을 수 없는 원안위 대신 자체적인 원전 감시를 원하고 있다.

2012년 환경운동연합과 박승준 일본 관서대 부교수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한빛원전에서 후쿠시마(2011) 체르노빌(1986)사고와 같은 재앙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는 최대 55만명, 피해액은 451조 원에 달하며, 피해는 광주·전남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원전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원전 감시활동은 의무이자 권리다. 그러나 현재 핵발전소가 단 한 개도 없는 중앙(서울)에서 전국 원전에 대한 모든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는 분소개입의 지역사무소만이 설치되어,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원전 안전 규제 당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원전이 위치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규제당국이 된다면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전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튼튼한 정책 수립과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30일 ‘지역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감시 및 방재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마련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컨트롤 타워를 차관급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위의 정보공개 확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원전 안전강화 3법’을 발의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원전정책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원전 안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전 인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이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빨래·도박·텐트... 무등산서 이력시면 안됩니다

### 여름 휴가철 내달 31일까지 일부 계곡 개방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31일까지 공원 내 증심사·원효사·덕산골 계곡 일부 구간을 탐방객에게 개방한다. 무등산 계곡의 경우 광주 시민들의 여름철 휴식 공간이라는 지역정서를 감안해 한시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야영, 어류 포획, 흡연, 취사행위 등의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된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공>

## 불법 거래·사육 야생생물 자진 신고하면 벌칙 면제

### 환경부, 내달부터 3개월간 신고기간 운영...위해 외래종도 대상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 사육, 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처음 발견된 피라니아 등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해 외래종과 불법으로 거래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공고일(7월16일)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

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진신고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벌칙이 면제된다. 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1에 해당되는 종,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육 및 보관 시설이 없거나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몰수 조치는 그러나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를 이송해 보호 가능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실시된다.

점검은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업체를 위주로 진행되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특별단속 및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아마존 유식 어종인 피라니아 등은 수입과 반입이 규제되는 위해 우려 등으로 지정하고, 생물다양성협상 위해 우려종 관련 규제 사항에 방사 금지 내용과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외래종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도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 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연캠프

### 초등 1~6학년 35명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여름방학을 맞아 ‘일상 속의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자연캠프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담양운수대모마에서 진행된다. 캠프 첫날에는 기후변화 체험관 방문, 하천에서 배우는 생태와 물 건강 그리고 시청각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둘째 날에는 기상미션을 시작으로 대나무 물 총 만들기, 물놀이, 다슬기 잡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주먹밥 만들어 먹기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 자연 캠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35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회원 10만원, 비회원 1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교육팀 이도경 간사(010-6639-0452, 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아**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아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